

# 美 민감 국가 지정, 국정원 조사하자고?

태평로

김진명  
논설위원



지난 18일 오후 국회 외통위·산자위·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민감 국가 목록’은 에너지부에 국한된 문제”라며 “큰일이 아닌데 마치 큰일인 것처럼 통제 불능 상황이 돼서 유감”이라고 말한 후였다. 실제 이 목록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17곳의 보안과 용역 업체 통제를 위해 작성된다. ‘민감 국가’란 명칭 때문에 실제보다 일이 커진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란 주장을 꺾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낭독한 기자회견 문 내용이었다. 미국 측이 제기한 “민감 정보 취급 부주의” 문제에 대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이 어디까지 연루”됐는지를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미 에너지부 감찰 관실 보고서에 나오는 사례를 언급했다. 미 에너지부 산하 한 연구소의 용역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행 비행기

를 타려다가 적발됐고, ‘외국 정부’와의 소통도 확인됐다는 내용 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국 정부는 ‘한국’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기술 유출 의혹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또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 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 행위”라며 국회 상임위를 열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한 뒤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보 활동이란 무엇을 했다는 것도 비밀이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비밀이다. 미국이 직접 한국 정부

민감 국가 배경 된 보안 문제 “정부 연루 조사하자”는 민주당 세계가 치열한 정보 전쟁 중인데 제 눈 찌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나 국정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도 아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이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보안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상대국이 먼저 무슨 혐의를 상세히 공개했다면,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고 정부를 질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도 아닌데 우리 국회가 먼저 한국 정부에 ‘범죄’ 혐의가 있으니 조사해 보자고 나서야 할 이유가 뭐가.

민주당은 아마도 문제의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정부·여당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말이다. 그런데 시기를 막론하고, 국정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미국에서 빼내려고 했다거나 상상해 보자. 설령 그랬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국회가 먼저 국정원을 불러 그런 시도를 했냐고 추궁하고 상대국보다 먼저 까발릴 일인가?

미·중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치열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적성국이든 동맹국이든 내 나라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다면 빼내려고 시도하고, 반대로 내 나라의 정보와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는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감시·감청하다가 들통났다고 해서, 미 의회가 이를 금지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치열해진 신·舊 과학기술 경쟁 속에 기술 보안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흐름을 배우는 것이다. 제 눈 찌르기 식으로 우리 정보 활동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 정보·기술을 빼 가려는 외국의 활동을 막는 조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이 그 첫걸음 일 것이다.

있던 작디작은 자식.

그렇게 슬픔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양 축사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양이 몸은 사람, 머리는 양의 모습인 것이다. 마리아는 신이 보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미 양에게서 새끼 양을 빼앗는다. 두 사람은 그 양에게 ‘아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식처럼 키운다. 오랜만에 방문한 잉그바르의 동생 피에튀르는 이 이상한 장면을 보고 기겁한다. 새끼를 돌려달라며 매일 찾아와 우는 어미까지 죽이는 결 본 피에튀르는 소릴 지른다. “그건 애가 아니라, 짐승이야! (It’s not a child, it’s an animal)” 하지만 이미 어미가 된 마리아는 담담하게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말한다. “알아요. 아다는 선물이에요. 우리의 새출발 (I know. Ada is a gift. A new beginning).” 영화 번역가



sible now. They’re saying it’s theoretically possible).” 마리아는 시간 여행이라면 으레 떠올릴 미래 여행은 안중에 없다. “시간 여행이냐가 과거로도 갈 수 있겠네(I expect it’ll be just as possible to go back in time).” 그녀에게 자식을 품고 있던 과거 생각뿐이다. 아주 짧은 시간 품고

황석희의 영화 같은 하루 [195] 그건 애가 아니라, 짐승이야

## It’s not a child, it’s an animal!

“슬픔은 당신을 바꾸지 않는다. 당신을 드러낼 뿐이다.(Grief does not change you. It reveals you).” ‘잘 못은 우리 별에 있어’를 쓴 작가 존 그린의 말이다. 시쳇말로 사람은 취해야 본모습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사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은 슬픔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영화 ‘람(Lamb·2021·사진)’은 결국 자연의 섭리까지 거스르게 되는,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잉그바르(힐미르 스네어 구오나손 분)는 아내 마리아(누미 라파스 분)에게 말한다. “이제 시간 여행도 가능하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만 (They’re saying time travel is pos-

## 社 說

###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거나 “의견 표명이요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때 핵심 실무자였다. 김씨가 극단 선택을 하자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는 김씨를 모른다 고 해대장동 사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이는 주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 비리라는 대형 사건의 책임과 직접 관련된 문제다. 판결처럼 단순히 ‘주관적 인식’이라고 일축할 성격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 문건에 국토부가 용도 지역 상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용도 지역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했다.

그런데 2심은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박 여

### 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최대 증가 폭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947명으로, 1년 전보다 11.6% 늘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출생아 급증 덕에 1월 합계 출산율도 0.88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75명)이 9년 만에 반등한 이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출생아가 많았던 예코 베이비붐 세대(1991~1995년생)가 혼인·출산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탓에 급감했던 혼인 인수가 늘어난 속에서 출산 신흥부부에게 축하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신흥부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1만명 늘어난 25만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구 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에서 0.7명대 합계 출산율은 한국 외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이다. 우리나

부가 어떻게 의견 표명이 될 수 있나. 2심은 또 이 발언이 대표가 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했다.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 말이 되나. 그런데 정작 이번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 사건에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건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는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인가.

라는 지난해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저출생·고령화는 연금 고갈, 복지 부담 증가, 생산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빈말이 아니다.

세계 최하 출산율의 원인은 모두가 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힘들고, 보육과 일 병행이 어렵고, 자녀 사교육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모처럼 찾아온 출산율 반등이란 희망의 불씨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 정부는 종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연금·노동·교육 개혁에서도 더 성과를 내 청년 세대가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中 서해 구조물’ 오랜만에 여야 한목소리 대응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장 중단하러”고 했다. 일주일 만의 당 공식 입장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중국의 우리 해양 주권 위협 행위”라고 했고, 위성락 의원은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 잠정 수역에 양식용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했다. 인원을 상주시키고 우리 조사선의 접근도 막았다. 이런 구조물을 12개나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만들고 무력으로 접근을 막으며 군사 요새화했다. 동중국해에선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10여 개 설치했다.

중국의 행태에 손 놓고 있으면 남중국해처럼 중국이 서해 영유

권을 주장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뿐 아니라 여야가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특히 친중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뭘 상관 있나. 그냥 ‘세계’ 하면 된다”고 했다. 국제 정치에서 통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런 민주당이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서해 영유권 수호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국회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국 구조물 철거 촉구 결의안을 내고 우리도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하는 비례 대응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등에서도 여야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 바란다.

대한민국 운명, 그대들에게 달려있다 ... **《범죄 피고인》이 나라를 속대발 만들고 있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은 **응답하라!** 이재명이 과연 **무죄인가?**

대법원 파기 선고만이 나라 구한다 | 《제2의 홍콩 / 제2의 베네수엘라》 일보직전이다 | 이재명 수호 방탄 사법 카르텔, 《권순일→유창훈→김동현→이예슬·정재오》로 이어져

갈 때까지 가고 마는가?

이재명이 무죄?

그가 고(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게 인정됐다고? 이재명-김문기가 호주에서 골프 치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중요한 부분을 **《확대》**한 게 **《조작》**? **《확대》**와 **《조작》**이 같은가?

세상이 완전 거꾸로 섰다. 대한민국은 더는 한 나라가 아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나라로 또 분단됐다. **《제2의 차베스-마두로 현상》**이 닥친 바람에!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독재자 차베스는 1999년에 **선거로 집권**했다. 2000년대 들어 차베스는 본격적으로 일당 체제로 돌입했다. **사법부를 장악하는 방법으로**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차베스는 사법부 요소요소에 자기 사람들을 갖다 꽂았다. 차베스 말을 듣지 않은 여성 판사가 30년 징역을 받았다. **법이 정치와 이념의 하위 체계로 전락**했다.

▲ 이 얼굴을 계속 보느냐, 안보느냐. 이 문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사진평예권 “세제-”, 차베스에겐 “형님, 현금실포 배워가유-”. 이것은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 / 제2의 베네수엘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처했다는 것을 말한다. © 뉴데일리

차베스는 여세를 몰아 **선거관리위원회**를 집어삼켰다. **부정선거로 국회를 접수**했다. 탄압 법규들을 멋대로 통과시켰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대체했다.

사법부의 베네수엘라화

《베네수엘라 민주민주 독재 이야기》가 **《남의 입》** 같이 들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 물어보자. **《김명수 대법원》**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요직 배치가 그와 흡사한 바가 있나, 없나?

《차베스 사법부》와 똑같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시절 이후 《이른바 진보》**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박혀 **《자기 편》** 입장을 기각해 주고, 무죄를 팽팡 때려 준 게 사실 아니었나?

권순일 대법관은 우물에 빠진 **이재명**을 구출해 주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야당 대표로서》** 기각했다.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위증 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오늘 **《이재명 선거법 위반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나라냐, 잭묵이나

좌익 운동권은 이 시대의 패권이다. 그들은 사법부에 이어 선관위를 가족회사로 만들었다. 국회 다수의의석을 낚았다. 독재법규를 불도저로 밀어제쳤다. 장관-검사-감사원장-방통위원장 29명을 **《숙청》**했다. 이게 나라냐, 잭묵이나?

어찌할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들! 자유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귀하들에게 달렸다. **응답하라, 이재명은 과연 무죄인가?**

마지막 희망

자유 국민! 2030-대학생들! 최후 순간까지 투쟁, 투쟁, 투쟁이다! 절망을 알기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재명은 의기양양하게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법귀정다.”** 사법귀정? 그런가? 그런가? **《2025 대한민국》**은 말하라! 정말 그런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3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